

第281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2月20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보고(계속)
 - 가. 노동부
 - 나. 근로복지공단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審査된案件

1. 업무보고(계속) 1
 - 가. 노동부
 - 나. 근로복지공단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시10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 가. 노동부
- 나. 근로복지공단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회의는 노동부 및 4개 산하기관의 2009년도 업무 집행계획 및 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이에 대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평가와 의견을 개진하여 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및 산하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경기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들어 취업자 수 감소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현재는 안정적입니다만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10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고용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노동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및 노사협력 확산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용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지원·확산하겠습니다. 세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금의 위기가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적 일자리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차별시정 활성화,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려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법·제도 등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급여제도 개선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는 노사와 국민 등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도

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력구조조정 법·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은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역 단위에서 노사협력을 확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민·정 비상경제대책 회의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충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중수 차관입니다.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입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이재홍 대변인입니다.

장화익 감사관입니다.

정철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기 국제협력관입니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입니다.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입니다.

이태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송영중** 기획조정실장 송영중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노동시장 여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금년도 입법 추

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입니다.

먼저 고용 동향입니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급감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도 금년 1월 취업자 수가 10만 3000명, 고용률은 1%p가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6%이고 실업자는 84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취업자 수는 2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경제 침체에 따라서 현장의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노사관계는 안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파업 발생 건수는 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건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으로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인력 감축, 또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 노사갈등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층의 취업 촉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사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신속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적극적 고용 안정 대책입니다.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와 취약 계층 고용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녹색 뉴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활성화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의 3분의 2를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을 3분의 2로 인상하겠습니다. 지원요건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재배치의 경우에 근로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고 고용 유지 훈련 시간은 월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감독·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경영·금융상의 우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교섭 실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 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임금 삭감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특례 인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휴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 유급휴가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휴업기간 중 훈련을 제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직 지원 및 실업자 직업 훈련 강화입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소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전직지원센터 등 민간기관을 활용한 전직 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확대 편성된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생계비 대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중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재취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빈 일자리 기업 DB를 구축하고 기업별 전담자·취업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에 의한 건설업·서비스업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 취업자의 규모도 제한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전체 고용 인원의 50% 이상을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 계층에 배정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봉사대를 구성 운영하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지원코자 합니다. 청년층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소셜(social)벤처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우수 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일모아'라고 합니다마는—을 가동하고 일자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실에 설치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통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대책입니다.

신규 채용이 격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 인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청년 인턴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학력 미취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 취업을 통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청년층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어학, 직무기술 등 연수 기회를 제공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연수·해외 취업 참여자 DB 구축, 해외 인턴 경험자에 대한 해외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전문계 고교 취업 지원 기능 확충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직업 진로 지도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잡스쿨, 취업캠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해서 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화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및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민간 여성 취업 지원기관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하여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 주부 단기 적응 훈련, 여성 가장 실업자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자 다수 고용 장려금,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등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고령자 워크넷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맞춤형훈련과 현장연수를 연계하여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고용촉진 단기 적응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훈련기간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대책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로 특화 훈련을 하며 맞춤형훈련 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입니다. 2012년까지 고용률 3%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위기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625명을 채용해서 센터의 지원 업무에 투입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 서비스 인턴을 추가 채용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운영하여 노동시장

전망 분석을 강화하고 국무총리실고용대책 TF와 긴밀히 연계하여 범정부적으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실직자 등 생계 안정과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고용보험은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 시에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 적용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차주 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취업 취약 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인 개척과 취업 알선 업무의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취약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용자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증액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팀 운영을 확대하고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서 임금 체불을 조기 청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체불생계비 대부 재원 증액도 추진코자 합니다.

사전예방·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소자 등 취약계층, 최저임금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무관리 능력과 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적인 노동법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 개별적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연소 근로자 보호, 체불임금 예방, 서면 근로계약 문화 등 4개를 중점 과제로 선택해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재 다발·취약 분야의 재해 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사업장 10만 개소를 선정하여 교육·재정·기술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조·기타 산업의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 기법을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모국어로 된 기술자료·특수검진결과표 및 특수검진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 직업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업병 유소견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1만 명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화학물질 통합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50인 미만 비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간 호사의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안전보건 문화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건 온라인 이벤트, UCC 콘테스트 등을 개최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및 근로기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과도한 사용 기간 규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수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 제출, 하위 법령 마련, 행정적 지원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근로기준 및 최저임금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의 유연화 합리화 명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청소용역 등 도급인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숙식비 공제 한도 설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기한이 도과할 경우에 최저임금 부재 시 예방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갈등 관리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 갈등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대 부문 중심으로 분규 해결 지원을 위한 노사관계 취약 업종 TF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관련 노사갈등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노사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임단협 교섭 주기를 가급적 2년으로 연장토록 노사를 지도해서 교섭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쟁의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 개혁 노력도 전개하겠습니다.

쟁의행위 대상·절차, 쟁의행위의 한계 등 노사 모두가 준수해야 될 쟁의행위 준칙을 마련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불법행위 예방팀을 운영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장·지역·중앙 단위의 노사협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의 노사협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단체교섭 지도를 강화하고 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작업조직 혁신, 업무 효율화, 임금 직무체계 합리화 등 작업장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협력선언 등 노사협력 사업장을 작업장 혁신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실천적인 지역 노·사·민·정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노·사·민·정 협력을 지원하고 자동차 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에 업종별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16개 시도와 관심과 의지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재원과 인적 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 사례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단위 노·사·민·정 협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실천적인 고통 분담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우선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경총이 자율적으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지난 1월 22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발족되었습니다. 노사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노사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적 지지와 참여 방안, 노·사·민·정 합의의 전국적 확산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고 합의문은 23일 발표 예정입니다. 합의문 발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노사협력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습니다.

판교 터파기 공사장 사고 경위와 대책입니다.

지난 2월 15일 8시 25분경에 깊이 약 22m 굴착공사 중 흙막이용 버팀대와 북공판이 붕괴되어서 근로자 11명이 매몰되었고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흙막이 지보공이 안정지반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의 조치 현황입니다.

2월 15일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붕괴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2월 16일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면 작업중지를 하였고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책임자를 의법조치하고 해당 건설사는 영업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 유사 현장에 대한 붕괴사고 예방조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붕괴 위험이 큰 대규모 굴착현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기술 지원, 점검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결의문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문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종합 대책입니다.

금년 7월 비정규직법 본격 시행과 경기 침체 상황이 맞물려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서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촉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1월 말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관련 대책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노동단체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장애인 고용 대책입니다.

결의문을 정부와 사업주단체 등에 송부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 고용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달성 목표를 금년부터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은 작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해서 금년 7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입니다.

2월 10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법안은 13건입니다. 금년에 노동부가 제·개정코자 하는 추진 법률은 총 15건으로 국정과제 실행,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경제위기 극복,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계획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송영중 기획실장님은, 장관님을 포함해서 이 업무보고서 미리 검토하고 나오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委員長 秋美愛** 지금 국회에서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가 연초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보고를 듣고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 또 필요한 예산 그것을 듣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 자리는 한나라당 당정보고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17쪽의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고위 당정협의를 하셨던 말건, 한나라당 중심으로 노동단체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시던 말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집권여당과 행정부 사이의 문제이지요. 그걸 왜 여기 국회 업무보고에 유인물로 이렇게 써 오시고 그걸 또 자리에서 버젓이 그렇게 낭독을 하십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산하기관장께서는 정부 기관과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와 영세·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95년 5월 1일 설립되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생활 안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산재보험 4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합의로 전면 개편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 결과 큰 문제 없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은 지난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희 3500여 모든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총 매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각오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송주 감사입니다.

이우현 기획이사입니다.

정구현 보험관리이사입니다.

고양배 재정복지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공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사업 추진 성과, 2009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다만 금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예산은 총 4조 8391억 원, 산재보험기금이 4조 308억 원, 고용보험기금이 1894

억, 근로복지진흥기금이 3402억, 임금채권보장기금이 2180억, 에너지특별회계가 607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새로운 산재보험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산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설명회 등 사전 설득 노력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요양 결정의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고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도 53.7%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재·고용보험 운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노력해서 산재보험은 4조 9785억 원, 고용보험은 4조 14억 원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시행하였고 도산과 파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객가치 중심의 전략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작년도를 창조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노사 합동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대내외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 경제난국에 따른 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전략 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입니다.

저희 공단은 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의 성공적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재원 2조 35억 원을 조성해서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했고 장기 실업자 등 자립 점포 임대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추가사업 재원 규모는 866억 원으로 신규 실업자의 훈련생계비 대부에 240억,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훈련생계비 대부에 356억,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27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지난 연말에 개정했고 1월 15일부터 조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자금의 조기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 자금 확보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산과 파산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체불입금과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용자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임대지원을 강화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자 선발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맞춤형 컨설팅, 실전창업 및 자신감 향상교육을 실시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학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용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근로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 24개소를 운영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자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운영을 통한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총 148명을 채용해서 산재와 고용보험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와 고용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건설기계 분야 27개 특수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추가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재 요양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서 요양단계별로 산재환자 개인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 의료기관 인증제를 금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 활성화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요양 초기부터 단계별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재활 대상자에 대한 집중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혼례비, 주택이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선진화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 문제는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통합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 협력체제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공단의 핵심사업 위주로 공단의 기능을 전면 재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통합 후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조직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장주도형 실시간 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중앙 집중화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중소복지사업을 통합·축소·폐지하고, 성과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효율적 복지시설 매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와 전주 스포피아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공단은 비핵심 기능을 통합·축소·폐지하는 등 과감한 기능정비를 추진해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글로벌 수준의 사회보장기관 도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님,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은 1982년도에 설립된 이후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관리, 외국인고용지원과 해외취업, 기능장려 등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호 감사입니다.

김동회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김홍재 능력개발이사입니다.

정재홍 자격관리이사입니다.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그간의 경영성과, 2009년도 경영목표,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외국인고용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 산업인력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로 같음하고, 조직과 정원입니다.

본부는 3이사, 1본부, 11국, 3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자격출제원과 국제HRD 교류원이 있고, 소속기관은 6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사가 있습니다. 정원은 1158명입니다.

예산은 2009년도 19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검정, 국제인력교류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외성과입니다.

07년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상 수상,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대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과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우수단체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과 기업혁신대상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공단의 경영 개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이며, 경영목표는 인적자원개발지원체계의 선진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과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영슬로건은 경영효율성 10% 향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09년도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HRD인프라 확충을 위해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 학습분류체계별 훈련과정, e-러닝 콘텐츠 등 관련된 모든 학습정보를 탑재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직업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하는 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수요가 많은 마케팅, 인사, 회계, 생산관리 등 4개 분야의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근로자 핵

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훈련과정을 무료 제공하고 훈련참여 근로자의 소속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학습 참여도를 제고하겠으며, 중소기업 HRD 지원과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능인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게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촉진 관련 행사를 9월경에 집중 개최하겠습니다.

기능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장려 종합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금년도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정상을 고수할 수 있도록 선수 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자격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격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현장 실무경력 인정 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술자격 효용성에 대한 평가 확대와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내 자격검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검정위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검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Clean 자격증 운영사업을 활성화시켜 인터넷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대여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고객 지향적인 검정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고객 중심의 자격검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과 시험일자를 수험자가 사전에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경력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공단 무방문 자격검정서비스 강화를 하겠으며, 고객의 시험실 입실 착오 방지를 위해서 시험일 2~3일 전 시험실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기준을 정비하고 시험문제 관리를 선진화하여 웹기반 출제관리시스템 구축, 문항·통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합격률 편차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문제은행의 보유문제를 최신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인력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어능

력시험도 문제은행식 시험문제 출제방식 정착을 통한 CBT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시험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업 등은 현지면접을 실시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용접·배관 등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훈련 및 자격수준을 점검하여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용채류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언어 지원 등 고충상담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 구인처 개척 및 우수 구직자 확보를 위해 해외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취업 주요 국가 박람회에도 참석하겠으며 재외공관, KOTRA, 한인상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구직자 확보를 위해 구직자원 저변확대를 위한 대학, 군부대, 고용지원센터, 각종 국내 취업박람회 등에서 해외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수행부처와 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인턴과 봉사경험자의 해외취업을 연계시켜 나가겠으며, 해외취업 연수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별·본부실국별로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과제를 소속기관장, 실국장 경영계약에 포함하여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출제원이 R&D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발표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경력개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급별·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 지향적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업무를 효율화하겠으며 성과 지향적 보수체계를 강화시켜 경영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주요 보직과 기관장에 대한 직위공모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면평가제도 확대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에 70% 이상 집행을 추진하고 시설투자비를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우리 공단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바꾸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최상의 보건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감사입니다.

김동섭 기획이사입니다.

홍용수 기술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재해 발생 현황 그리고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 금년도 추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관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도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

예산현황 중에서 하단 부분에 있는 지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금년도 전체 예산은 2522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13억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핵심 내용은 3페이지 맨 하단에 예산 감소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으로 840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안전 기술사업으로 138억, 보건사업으로 185억, 교육사업으로 63억, 문화·홍보사업으로 82억, 정보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26억, 연구사업으로 74억, 검사 및 인증사업으로 58억, 국제협력 11억, 통계 10억,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재해 발생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율은 0.71%로서 2007년보다도 0.01%p, 사망만인율은 0.12%p가 감소했지만 절대 재해자 수는 6.3%인 5659명, 사망자는 0.7%인 16명이 증가하였고, 이를 사고하고 질병으로 구분해 보면 업무상 사고는 7397명, 9.4%가 증가한 반면에 질병은 1738명, 15.1%가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5.0, 건설업은 7.5,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 9.2%가 증가하였고 광업은 16.8%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근로자 점유비율이 52.6%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8.3%가 발생해서 2007년보다도 그 점유율이 2%p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성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 5만 1300개소에 대해서 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9794개소에 대해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감소를 위해서 18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인간공학적 전문기술 지원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9개사에 대해서 안전보건 경영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홍보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등 60여만 명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고령, 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총 736종의 안전보건 미디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안전공학, 산업위생 등 총 73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공단의 경영목표는 작년보다도 절대 재해자 수를 1만 명 감소시킨다, 그래서 금년도 산업재해율을 0.63%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을 경영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중점 추진 내용입니다. 협착, 전도, 추락 등 사고성 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화재, 폭발 등 대형 재해 발생 위험의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과 작업환경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 청년 인턴사원 등의 활용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중점 추진내용으로 정했습니다.

8쪽에서는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과제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성 재해의 획기적 감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사업을 2008년에 비해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5만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 기술지원을 한 것을 금년에는 1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입니다.

먼저 방문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10만 200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6만 5200여 개소이고 그리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 3만 5000개소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기관별로 재해통계를 정밀분석해서 위험이 높은 업종·규모·지역·분야별로 고위험군을 선정해서 저희들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재정, 교육,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위해서 조직 구성,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일선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840억이고 융자금은 916억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는 740억 원 수준에서 클럽사업장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국감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소음, 분진, 유기용제 취급 등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억 원의 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는 916억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와 인증입니다.

공단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보유하는 위험기계 12종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7만 3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설계·생산공정 등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인증도 6만 1000여 건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 질병의 저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가 금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1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정부에서 신규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조사이고 5인 미만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직업병 유발 화학물질 12종에 대해서 유통·사용 실태와 노출 정도를 조사해서 개선대책과 관련된 정보를 410여 개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암성 물질 취급 사업장 노출 수준 감소

를 위한 기술 지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수첩 교부, 특수건강진단 지원 등의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건강지킴이 사업도 수시로 수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입니다.

50~300인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실시하겠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보건서비스기관을 활용해서 보건관리 위탁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만 명, 32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근로자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그리고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인간공학적 개선 등 작업관리에 관한 방문 기술지원 사업도 1800여 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방기술의 보급입니다.

이 분야에 관한 금년도의 특이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매년 한 40~50개 정도 해 왔던 것을 금년에는 192개사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와 확인제도를 통해서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KOSHA-18001로 불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인증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사후관리와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는, 먼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은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또는 설비에 대해서 신설, 이전 또는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설계단계에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안전성을 심사해서 설비 가동 전에 심사내용을 준수토록 하고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교량·터널·굴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착공 전에 계획서를 제

출받아서 안전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KOSHA Code라고 불리는 안전보건기술지침도 150건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관한 세부지침과 권고사항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선진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주요 변경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법정 직무교육제도가 복원돼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자료 개발을 대폭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보급코자 합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은 36만 4000여 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실험·실습 위주의 71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인력도 1만 80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으로 교육 기능이 많이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자 법정 직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지역별·업종별로 사업주나 근로자, 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재해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지역별·산업단지별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고객 대상별로 홍보매체를 구분해서 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사업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설비나 작업 단위별로 교재, 교안, 동영상 자료 등을 500여 종 개발할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과 공동 개발해서 현장감 있는 자료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한 파일 형태의 전문 기술자료도 450종 정도를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고령·여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도 130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프라입니다.

금년에는 56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통계 생성

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겠고 그리고 직업병 역학 조사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가 300건이 계획되어 있고 위험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와 평가시험도 88건이 계획되어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은 5만여 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입니다.

8개국, 17개 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국제 안전보건 동향을 신속히 국내에 보급하고,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채택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울선언서의 취지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세계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샤넷(KOSHA-NET)이라고 불리는 산재예방 정보시스템도 보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보강하겠습니다.

19쪽에서 현안사항으로 한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역학조사입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조직문화, 고무흡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3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반도체 제조공정 전반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12월 29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자 5명에 대한 개인별 업무 관련성 평가는 다음주 중에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턴직원의 경우에는 미래 산재예방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목표로 210명을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끝나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현장실습 강화, 엄격한 성과평가로 개인별 실무와 전문기술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심사가 끝나고 다음주 중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9년 저희 총예산은 융자금까지 포함하면 3400억입니다. 이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 앓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항상 장애인 입장에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현재의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인주 기획관리이사입니다.

최근에 임명된 손영호 고용촉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취업지원 및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구를 위해서 명단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적 직업능력평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중점을 둔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장애 인력을 공단 5개 센터에서 253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눔맞춤훈련을 실시하여

449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고 훈련컨설팅을 통해서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 내실화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 친화적인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 융자 및 무상지원을 다양하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인 표준사업장 설립 비용을 지원하였고 대기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유도하고 지원하여서 작년에는 포스워드 등 8개 회사가 여기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153억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식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고용상 차별금지 사항을 홍보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조공학 박람회 등 국민과 함께하는 뷰티풀 챌린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 정책 선진화를 위해서 정책개발과제 연구를 하였고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문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고용개발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공단은 금년에 수요, 공급, 환경, 내부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역량 강화 지원, 적합 장애인력풀 확대,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여서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고용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 준비반 운영, 시험편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인력풀을 확보하여서 공직 수험정보 등을 제공하여서 정부부문에 많은 장애인들을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 계획 중인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지원의 효율화입니다.

의무고용률 2% 달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용사업주 지원을 통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공단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 친화적 사업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표준사업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고 표준사업장에 대기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까지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서 장애특성 및 직무를 고려한 맞춤 및 상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서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합 장애인력풀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의 양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1570명의 능력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을 전제로 기업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맞춤훈련 비율을 상향해서 약 70%에 이르도록 해서 대기기업의 수요에 만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장애유형 및 훈련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상담·평가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은 연 1만 2000명 이상 공단을 통해서 취업을 목표로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고용 의무사업체와 중증 및 여성장애인에게 중점을 둔 취업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고용계획서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평가를 통해서 장애인의 특성과 직업능력을 파악해서 전문평가서비스를 연 5000명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평가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업체에 선 배치·후 훈련을 하여서 고용을 유도하는 지원고용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식개선을 통해서 기업주들에게 장애인의 편견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EDI 행동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연 1000명 이상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견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이 준비에도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접점기관 연계 활성화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721개의 기관과 연계하여서 장애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집에서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통계 및 고용개발 연구입니다.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해서 기초통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직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으로 감량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까지 정원의 10%인 66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명예퇴직과 사양직종에 따른 교사들을 첨단산업 분야로 재배치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본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방조직을 확대해서 점점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과 성과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와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중심의 사업재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핵심기능 위주의 사업재편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부담금 장려금 등 전자신고를 유도하여서 많은 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힘들 때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용촉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서 작년 12월 달부터 장애인근로자지원반과 기업지원반을 구성해서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들이 피

해를 먼저 보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 및 공단 센터 수료생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실시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본부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주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미취업 장애인의 취업능력 개발과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장애청년 인턴제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직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서 우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민주당 김상희입니다.

노동부에 너무나 쟁점 사안이 많아서요,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비정규직 4년 기간연장, 최저임금 문제 이 부분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작년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그 당시 5인 이상 사업장 2년 초과 근속한 근로자가 97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비정규직 기간제한은 4년으로 연장해야겠다.' 이 때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그때 이미 1년 후에 오게 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인식이 됐다

고 볼 수 있고, 4년이라는 것까지는 그때 분명하게 결론이 가 있었는지 그건 지금 당장 물어보시니까……

○김상희 위원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감이라든가 상임위 보고라든가 계속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추적을 해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굉장히 일찌감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뭘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몇 번 들으셨겠지만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해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대 2만 명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결과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어느 한 연구기관에서 한 겁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도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연구소 소장의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거 정말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97만이 해고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97만이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2년 근속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란 말이에요. 그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2년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수가 97만인데 그거하고, 그러면 2009년 7월에 와서 몇 만이 해고될 것 같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7월 당월을 말씀하십니까, 그 7월 한 달 동안?

○김상희 위원 7월부터 하반기까지 한번 죽 말씀하셔도 좋고요, 딱 7월을……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통계 자료 없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나 대강 유추할 수가 있죠.

○김상희 위원 대강 유추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리고 그러한 해고는 이미 지금부터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정책 지금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800만 비정규직의 생사,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강 유추하면서 정책 결정하면 노동부장관님 정말 큰일 날 그런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유추하신 거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대략 유추했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242만 아십니까? 그 숫자는 틀림없는 것 아십니까?

○김상희 위원 그 근거 자료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근거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42만 명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나마 근거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김유선 소장이 얘기한 7월 기준으로 2만 명 그리고 6개월을 치면 $2 \times 6 = 12$ 해서 12만 명,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건 단지 노동부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대략 유추한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입니다.

○김상희 위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차례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하고 대한상의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여론조사에서 몇 % 나왔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어느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번 했죠. 그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거기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구체적인 통계를 원하시면 저희 근로기술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6%, 63%, 66.5%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2008년 8월 전까지는 비정규직법 개정하고 나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8월 이후에 노동부의 입장이 슬슬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언론 자료를 죽 보니까 기업은 참 열심히 만나셨더라고요. 그렇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얼마 전에도 경영자총회에 가서 강연하셨죠? 그런데 노동계는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동계에서 초정을 하면 물론 제가 가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저를 초정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이십니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초정을 해야만 됩니까? 노동부장관이 노동계를 초정하면 안 됩니까? 노동계 초청해서 소통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까지 저희들은 소통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강연이 아니라 소통을 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소통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 실무자들이 간부들과 접촉도 하고 있고……

○김상희 위원 저는 실무자들이…… 아니, 노동부니까 노동자들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께서 이런 중요한 정책 판단을, 이걸 노동부의 수장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동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를 든다면……

○김상희 위원 한 번도 안 만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를 들어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김상희 위원 한국노총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은 만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민주노총에서는 정식으로 저 보고 만나자는 얘기를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요, 그것은 노동부장관께서 만나자고 하셔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5~6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합의한 비정규직법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하고요. 노동부의 수장께서는 노동계 만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죠.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 단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우선 말씀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면……

○김상희 위원 아니요, 민주노총도 안 만나셨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 간부들 만났습니다. 제가 왜 그런 간부들 안 만난 줄 아십니까? 제가 조선업종 현장에 갔는데 거기가 민노총 사업장이었고 거기 간부를 만났고……

○김상희 위원 아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나,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단체입니다.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는 현장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한 번도 안 만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김상희 위원 의견 수렴 안 하셨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수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런 단체 사람들 꼭 다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비정규직 관련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노동부장관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폭발력이라고 지나치게 표현하시기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상희 위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있기 전에 노동부장관은 8월부터 현장에 계속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속 시그널을 보내서 비정규직법은 잘못 제정된 거고 이것 바꾸겠다, 기간 연장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대한상의에서 전국 313개 기업에 여론조사를 하니깐 이때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36%로 반으로 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께서는 끊임없이 비정규직법 개정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결단 내리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안 돼 있고 논의도 안 돼 있고, 노사정위원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역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하고 법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2008년에……

○**김상희 위원** 몇 년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MB정권 출범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뭐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새로 2기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 국감 이후 여기에서 얼마나 혼났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면 답변을 안 듣자는 것입니까?

○**김상희 위원** 답변하세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하셨느냐 이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일찍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주의를 환기한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놔두고 제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제 직무에 태만한 것이고……

○**김상희 위원** 백만 실업 대란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십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왜 달라졌느냐, 이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서 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도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기업도 최근에 와서……

○**김상희 위원** 장관님 2008년 11월 경제 위기 심각했을 때도 노동부 조사에는 기업들의 66.5%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하나의 여론조사지……

○**김상희 위원**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제도 바꾸겠다고 한 11월 이후에 계속 사업장에 시그널을 보내니까 2009년 1월에 바뀐 것입니다.

장관님,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계속 현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정책 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정말 잘못된, 노동부 수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 위원님께서 근거 없이 얘기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요……

○**김상희 위원** 근거를 대십시오. 그러면 근거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노동부에 그것을 요구했고 아무런 근거 안 보내 주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놓아 두면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장관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계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백만 실업 대란설을 8월부터 일으켜 가지고,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생존권을 빼앗는, 노동부장관계서 노동부의 수장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극단적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견해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왜냐면요, 왜 사회적인 합의 과정 없이 노동부장관계서 먼저 노동부의 수장이 현장에 시그널을 계속 보내시느냐 말입니다.

왜 단정적으로 비정규직법은 잘못되어 있다, 바꾸어야 된다, 4년으로 연장해야 된다, 최저임금법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문제의 제기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께서 그런 방식으로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해결책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오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제기 안 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판교 SK케미컬연구소 신축 공사장 붕괴 사건 말이지요.

SK건설이 자율안전관리업체였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어떤 법,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산업안전보건법 48조에 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48조에 있습니까?

48조에 자율안전관리업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에 따른 시행규칙 121 조입니다.

○김상희 위원 시행규칙에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이 시행규칙은 어느 법에……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말씀드린 48조에 바탕을 두었습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48조 어디에 있습니까?
위임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꼭 위임 사항이 있어야만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김상희 위원 위임 사항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임 사항이 없는데 스스로 노동부에서 규칙 만들어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 계속 해 온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설명을 좀 제가……

○김상희 위원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조원진 위원 1분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어제도 그만큼 했으면 얘기를 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왜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잠깐……

○조원진 위원 양해를 먼저 구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이 자리에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원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잘못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김상희 위원 이 자리에서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일이지요.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15분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무런 물음도 없이 보충질의 를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간사가 저보고 미안하다고 해서 어제 넘어갔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문 할 때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 달라,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님이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요청을 해야지요.

○**김상희 위원** 제가 양해를 구할 정도로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원진 위원** 시간이 지나면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어제 오셔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오늘은 지켜 주셔야지.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15분에서 몇 초 지났습니까?

○**조원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막은 거예요.

○**김상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로 규정이 있잖아요.

○**委員長 秋美愛**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상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바꾸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답변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委員長 秋美愛**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자율안전관리하는 데서 사고가 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안전 보건 행정을 하는데 모든 사업장을 우리 산업안전 감독행정 역량으로 다 커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동안 재해 발생률이 양호한, 낮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감독을 면제하는 조치가 아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45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명문으로 위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특정한 기업에 불공정하게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뜻이 아니고 산업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97년부터 행해져 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법적 근거가 더 마련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두고 우리가 너무 재촉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한 30명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규모가 큰 상임위원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한번씩 질의시간을 가지는 데도 벅참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언시간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를 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회의 주인공은 의원님 각자 한분한분이십니다. 그래서 상임위 운영하면서 사실은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의 발언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는지를 인지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발언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의라고 우리가 서로 꼬집고 질책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이런 장내에서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서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사실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또 그 전에 아مانة당과의 무슨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실업 규모가 1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노동부의 발언이 있는 후에 노동계 측도 반발이 있었고 그게 한 20~30만 정도이지 않겠느냐 하는 일각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산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이 확고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것을 뭐 서로 설왕설래할 그런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단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진단과 분석이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 저희들은……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서면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것이 기업에 질문해서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100만이라고 아주 쇼킹한 발언을 할 때는 그 나름의 정확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제대로 된 서면자료를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원한테 또 위원장인 저한테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것을 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본회의장하고 달라서 우리는 전문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간사 간에 합의가 15분 한 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위원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보충질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저희들이 이해를 해 준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어제……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조원진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위원장을 일일이 공박하는 것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질의의 주인공들은 위원님들이십니다. 저는 사회를 볼 뿐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겠다 하면 그것은 간사님들의 합의도 떠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답변을……

○**조원진 위원** 이것은 간사 합의 사항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간사 합의는 사전에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에……

○**조원진 위원** 그러면 간사 합의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조원진 위원** 간사 합의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내가 이렇게 물었지요? “보충 질의하십시오.”가 아니라 “위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것을 묻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조원진 위원**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성천 위원** 김상희 위원님, 그만하세요.

○**김상희 위원**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강성천 위원** 김상희 위원님, 그만 합시다. 할 말 많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간사 합의를 해서 15분으로, 1회로 끝나는 것으로 하신 모양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들께서 그 사항을 합의할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간사들께서 합의를 하실 때 일단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가 그렇게 합의한 사항은 위원회를 진행을 하다가,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본회의 대정부질문도 아니고……

○**조원진 위원** 김상희 위원님,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간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이 초과되어도 그것은 인지상정으로 제가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제 마이크가 꺼지면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가 꺼지지 않으면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어지는 발언이고 그리고 제가 길게 발언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상희 위원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조원진 위원 변경될 수 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김상희 위원 회의를 하다가 사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원진 위원 아니,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은 야당 위원님들, 여당은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돌려도 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지요.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간사 합의사항은……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법안소위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秋美愛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여당 야당이 법안소위 합의를 했는데 법안소위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니까?

○김상희 위원 그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조원진 위원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얘기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조원진 위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지금 법안소위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김상희 위원 다른 겁니다.

○조원진 위원 뭐가 다른 겁니까?

○김상희 위원 다르지요. 그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그만하시고 진행하시지요.

○박대해 위원 위원장, 진행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 하나는 위원님들의 인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위원님들 각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가 15분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그게 끝이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법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을 예를 드시는데 본회의장은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주질의 의원의 질문시간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오고, 그 관계로 인해서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이고, 마이크를 끄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왜? 국회는 위원님들 각자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자문해 주기 위한 국회 나름의 고유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계라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마이크의 종속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끈다고 해

서 발언을 멈출 이유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각자가 간사 간에 양해한 물에 따라서 가급적 따라줘라 하는 그런 신사적인 틀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또한 장관의 답변이, 또는 정부 측의 답변이 미흡하다거나 추궁할 게 있다거나, 또는 모순된다거나 할 때는 그 답변에 관해서는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박하면서 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를 어겼다, 간사 간의 합의가 국회의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는, 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기구도 아니고 틀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보조적으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당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내부적인 것이지 그것을 위원장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금도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급적 고성이나 오고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박대해 위원이 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간사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법안소위 구성하는 것은 여야 합의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법안소위 구성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법안소위를 구성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박대해 위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노동부의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대한민국 노사를 전부 아울러야 되는 장관님의 고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새삼 절감합니다.

조금 전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이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고, 앞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장관께서 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달라는 부탁을 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또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속노조도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노사민정비대위가 빠져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노사민정비대위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하여 정부와 노동계 간 의견차로 불협화음이 있었고, 지난 17일에는 한국노총이 회의도 중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노사민정비대위가 왜 이렇게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역시 노와 사, 또는 정이 서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로 의견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 회의가 다소 지연이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대체로 노와 사가 큰 틀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가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측은 임금삭감액 손금산입의 한시적 허용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노측에는 이렇다할 유인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업근로자지원수당 신설, 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되는 등 도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놓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양보하기 힘들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3일까지 노사민정 대타협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타협이 잘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하여튼 목표를 일단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서로 그날에 하기로 했으니까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92.6%가 잡세어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과반에 육박하는 49.6%는 잡세어령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로 노조의 양보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일자리 나누기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의 동기도 특히 중소기업 가까운 쪽에서는 당장 근로자들이 해고당할 절박한 위협에 놓여 가지고 우선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던 임금도, 상여금도 반납할테니까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좀 더 괜찮은 사업장은 해고위험은 없고,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임금을 우리가 먼저 삭감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만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잡세어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양보가 필수적이고, 또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향적이고도 과감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측에 임금삭감액 손급산입을 제시한 만큼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 비상대책회의 실무회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저희들도 기획재정부 쪽과 조금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또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입니다.

○**박대해 위원** 노동계는 정부가 걸으려는 세계·행정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임금동결과 삭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관께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은 청년실업 문제, 요즘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얼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최근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종전에는 7%대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는 8.2%로 나타났습니다.

○**박대해 위원** 약 한 35만 6000명 정도가 나와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정부 공식통계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84만 8000명인데 청년실업자가 35만 6000명이면 대한민국 전체 실업자의 한 42%가 청년실업자라는 그러한 애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이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취업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소위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합니다만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3월 달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크게 양산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체로 대졸자의 경우에는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런 경제상황의 호전이 따르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그 정도 듣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특히 대졸자 46만 명, 고졸자 10만 명 등 56만 명이 배출될 예정이고, 또 올해 일자리가 20만 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청년 고용상황은 분명히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보면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만 해도 인턴지원이라든지 글로벌취업지원, 또 직업훈련, 종합고용서비스, 또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창업지원 이렇게 수십 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더라도. 물론 지금 아주 비상사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시책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볼 때 전체로 보면 그렇게 가짓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나름대로 각 부문 별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인턴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 노동부에서 하는 청년인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는 것은 6개월간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계속 저희들이 또 6개월 지원하는, 그것은 완전히 취업을 위한 인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턴은 이것 자체는 사실 임시직 일자리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취업대책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위기에 그런 직장의 경험도 갖고, 또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전체로 본다면 3만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에 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제도가 아니라면 미봉책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 가운데 효과가 의문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젊은이들 어학연수, 기술연수를 시켜서 해외로 취직시키겠다는 그런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래서 해외취업에 5만 명, 해외

인턴에 3만 명, 해외봉사에 2만 명, 이렇게 금년부터 5년 동안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어느 나라로 진출하게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박대해 위원** 대략 어느 나라로 보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우선 가장 큰 규모로는 글로벌리더의 경우에는 미국과 체결한 WEST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해외로 내보내는 이들 나라에도 실업률이 아주 높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젊은이가 진출할 주요국의 실업률을 볼 때 2009년 1월 현재 일본이 4.5%, 캐나다 7.2%, 미국 7.6%, 심지어 스페인 같은 데는 14.4%나 됩니다. 하나같이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높거든요. 캐나다는 우리나라 실업률의 2배고, 미국은 2배가 넘습니다. 스페인은 무려 4배가 됩니다. 자기 집 곳간 채울 쌀도 없는데 옆집 자식 입에 들어갈 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연말 전 세계 실업자는 약 5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재고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해외취업은 현재 해외글로벌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에 따라서 우리 노동부가 약 2만 3000명 플러스 KOICA나 KOTRA에서 WEST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받고 난 사람을 다시 해 가지고 5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만 3000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한 4200명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캐나다에 우리 주재원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호주 캐나다 쪽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대해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다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이 보장되는 취업알선실적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에 1548명, 2008년에 1433명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지금 올해 노동부의 해외취업 목표가 몇 명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글로벌 프로그램으로는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례 없는 경제위기 고용한파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 무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에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놓고 자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에 폭력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용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 경제회복 후까지, 아까 금년부터 5년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5년 기간의 중장기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발등의 청년실업 이런 마당에 한가한 그런 계획이 아닌지에 대해서 장관 답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급한 상황입니다마는 또 한편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도 한몫을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로벌청년리더 프로그램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이 각 국에 대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제가 어려운 국제적 상황하에서도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에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도 쌓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시끄럽네요.

노동부 최대 현안이 비정규직법 개정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비정규직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노동부가 어떤 개선책을 법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여당에서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안이 여당에서 잘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권선택 위원 노동정책의 수장은 노동부 장관인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분석, 개정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 또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 또 반대가 있다면 여론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자는 노동부장관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으로서의 비전 철학 원칙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여당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서는 장관이 너무 자기 소신만 얘기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시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의 입장만 가지고 관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저희들은 대단히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물러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고요.

의원입법이라면 절차적인 간소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과정의 정당성, 민주적인 합의절차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다, 입법부의 기능이다 생각하고, 저희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위낙 삼권분립하에서는 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논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보면 비정규직 문제지만 정규직과의 관계라든가 노사간의 관계, 아주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렇다면 노동부의 수장으로서 노동 정책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반영시키겠다 하는 의지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시다마는 최종적인 저희들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로는 적어도 기간제로 당장 해고위기에 직면한 근로자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을 저희들은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근본적 해결은 아니나 이것이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양산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당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를 들면 윤중현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고용기간제한을 없애는 것이 옳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이 공식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율되었든지 협의가 된 발언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장관으로서 했다면 장관의 입장에서 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는 기재부에서나 다른 정부 일각에서도 항상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근본적 해결책으로 생각할 때는 기간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동부는 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것이 4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선택 위원** 기재부장관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권선택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상충이 되고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 조정을 하는 노동정책의 수장은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서 이미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선택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절차,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나 협의가 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횡수가 아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까지 거의 격주로 만나서 협의했다고 합니다.

○**권선택 위원** 양적으로 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성과가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대화를 해도 입장이 다르면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을 보여 왔습니다.

○**권선택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겁니까,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시간이 아니라 입장이 바뀌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권선택 위원** 그 회의결과를 발표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호간에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체로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의를 구하기까지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사실상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택 위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23일까지는 무슨 안을 내놓겠다, 대타협방안을 도출하겠다,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날짜를 그날 딱 할 수 있을 건 장담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사 간의 대화가 성숙해지고 거기에 정부가 잘 뒷받침되고 하면 이게 순조롭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반드시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선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이념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대타협, 노사 간의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공기관 대졸 초임을 16~30% 삭감하겠다, 오늘 기사 보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노동부도 관여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건 기재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회의에도 의견을 듣고 그랬습니다.

○**권선택 위원** 혹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 스스로 내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 삭감하겠다 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장관으로서?

○**권선택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영희** 장관들의 경우에는 정무직의 경우에 대체로 지난 번 장·차관 워크숍 때 이미 합의했습니다마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 10% 정도 더 감면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발표하는 것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발표됐나요?

대통령도 참여가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정무직은 포함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권선택 위원** 대통령도 정무직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통령께서 월급을 안 받

으시지 않습니까?

○**권선택 위원** 월급이 왜 없어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하여튼 다 포함은 됩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이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고용보험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금의 적자폭이 크게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해 8000억 적자를 봤네요, 그렇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난해 아마 그 정도,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금년도는 훨씬 숫자가 많아지겠죠? 1조 10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통계도 아마 과거에 3% 성장전망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까지 성장전망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적자폭이 더욱 커질 텐데 예상숫자가 나와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예상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전체적으로 전망을 할 때 저희들이 금년 상황 또는 내년 상황까지 다소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좀 어려운, 악화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업급여 케이스로 볼 경우에,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저희들 고용보험제정은 아직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큰 어떤 어려움은 있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1월치 통계를 보니까 실업급여가 36% 늘었네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적립금이 7조 9000억인데 당초에 5, 6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그에 못 미치는 숫자 내에서 이게 다 소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우리가 또 기금을 통해서 적립

을 하게 되고 하나니까……

○**권선택 위원** 지금 경제전망으로 봐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실업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잡세어령 문제라든가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연장하고 하는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권선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금만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하겠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 적립이 대체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지출보다 한 1.5~2배 정도는 되는 것이 건전하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6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출요인이 많아져 가지고 고용보험재정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형태로, 일반회계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고용보험기금만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겠다, 3월 중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실업대책 규모가 어느 정도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권선택 위원** 가장 부족한 게 어디입니까? 가장 부족하고 긴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권선택 위원** 노동부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입니다.

전체로 본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 부분에서는 우리 노동부 부분, 특히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부분이 상당히 커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한 3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미니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선택 위원** 장관님 머리 속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 정도는 그리셔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입니다.

○**권선택 위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

이다라는 것은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라든가 고용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상했던 부분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물론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차이가 나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비 대부랄까 생활안정자금 부분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폭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개별연장급여는 지급요건을 이미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량사태 때 쓸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이것도 지금 시행할 겁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원래 법적요건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선언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 쓰면 추가지출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2개월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권선택 위원** 60일?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 각종 민간에 주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이네요. 거기에 보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다음에 금년 1월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약 1800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경찰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노동부 소관은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한 7개 정도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기

본적으로 불법·폭력시위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한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방침과 함께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물어볼게요, 장관님은 개혁론자시니까.

이러한 단체에 대한 편중된, 제외시키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이렇게 되면 친정부단체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라고 해서 지원 안 한다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을 뒤탈까요, 어떤 기준에 어긋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단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지 정부정책에 비판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외하는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적인 집회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까지를 중단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입니다.

○권선택 위원 장관님 평소 소신 같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든다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그 광우병대책위원회의 위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그런 게 민공노라든가 여성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주도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일자리사업 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또 법률구조사업 등등 꽤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 주면 되겠습니까마는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적용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다음 오후 속개시간을 2시 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경제를 살려서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걱정을 앞서서 풀어 헤치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안일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실업은 늘어가고,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고통에 눈을 맞춰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우리 경제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비정규직보호법이 금년 7월로 적용이 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아까 추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5인 이상 업체로 본다면 기간제의 경우에 260만 명 정도 됩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 현재는 5인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 7월이 되면 그 2년 기간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작년 8월에 조사가 된, 지금 그게 우리가 본 가장 큰 조사로서 나타난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 이미 2년 초과가 됐던 근로자가 한 96만 800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42만 명, 그리고 1년 이하이지만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1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초과는 이미 이번 7월이 되면 그것은 더 초과가 되는 경우고요. 1년에서 2년 사이 됐던 사람들도 상당한 부분, 또 1년 이하였지만 6개월 이상 된 사람도 사실상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인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금년 7월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2년이 넘어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교체 사용하거나 또는 해고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 불안에 처한 그런 위치, 기로에 놓인 양반들이 전부 합쳐서 140만 명 정도, 작년 8월 조사로. 그러니까 8월 조사라는 게 작년 8월 그 당시에 이미 2년 초과한 사람이 96만 명, 그다음에 1년 초과해서 2년 이하가 42만 명, 그다음에 1년 이하인데 금년 7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그래 가지고 전부 합쳐서 한 14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된다 이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것은 통계치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있는 고령자 65세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정해진 자, 출산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빼면 한 20만 명 정도가 빠질 수 있다면서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대체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이것이 통계치인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하지요. 하지만 추산일 뿐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로에 선 사람이 한 120만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그냥 놔둘 것인지, 그냥 놔두면 정규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전에 해고를 한다든가 교체 사용한다든가 외주화를 하면 일자리를 모두 잃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사이에 그런 부분 중에서 상실한 사람들도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나와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100만 명 내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고,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과연 얼마나 바꿀 것인가, 기업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5인 이상이고 100인 미만, 주로 중소기업 이게 거의 61%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다음에 100인에서 300인 미만 이게 9.9%, 300인 이상이 9.2%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럼 여기서 정규직으로 될 비율은 가장 높게 보면 얼마나 돼요? 전체를 놓고, 한 100만 명이나 120만 명 중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볼 때 각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20%라고 하고 만약에 최저치로 한다면 한 10% 남짓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20%면 한 80만 명 정도가 교체 사용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10%면 90만 명 정도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또 한 가지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령 노동계에서 이 비정규직보호법의 2년제를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주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금융노련 그런 쪽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숙련돼 있고 해서 정규직화할 비율이 매우 높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이게 다 300인 이상 사업장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부분은 상당한 부분 이미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대부분의 거기는 어디냐면 100인 미만 사업장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게 60% 이상 되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기간제를 2년에서 4년 늘린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런 100만 명 이상 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시그널 얘기했는데 시장에 다 시그널을 주면 해고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리고 바뀌어야 해고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논란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사실은 정부가 그런 개정을 할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기업이 그 법이 틀림없이 안 고쳐진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법이 고쳐진다면 그래도 비정규직이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업들이 내년 7월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옛날에 이랜드 사태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비정규직법 시행되기 전에 이랜드에서는 비정규직을 전부다 해고했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지금 2009년 7월이 되기 전에, 법 시행 전에 문제없기 위해서 미리 미리 해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매우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이미?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렇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혹시 경총이라든가 기업들이 원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경영자 쪽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법을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경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2년 되기 전에 해고를 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용 계약을 연장할 안 하면 그만이고 교체 사용하거나, 외주하거나, 외주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고 4년이 되면 또 4년 후에 똑같은 문제니까 경영자 쪽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노동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기업을 위해서 노동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이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냥 해고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나 우리나라당에서나 우려하는 것은 뭐냐? 순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그리고 그런 것은 한번 실직 사태가 오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법이 시행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하지만 그건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예요. 정부나 책임 있는 여당이나 정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이 실직을 하고 전체 일자리 수는 그대로 유지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생

각하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80만 명이면 얼마나 여파가 크겠어요. 더구나 지금 경기가 위축돼서 안 그래도 실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보도가 되면서 촉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노동계와 함께 협의도 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그랬으면 정부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작년 8월부터 이슈화를 시키고, 물론 장관님이 일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슈화를 시키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로서는 상당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분위기가 전혀, 저희 주장들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무슨 친기업 정부가 들어서서 친기업적인 하나의, 근로자에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자꾸 고통을 해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또 그 때문에 말하자면 본의 아닌, 마치 제가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도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큰 관심사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장관님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노동계의 주장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든가 공공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규직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선을 할 때 그것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이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다수에게 어떤 이익이 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금융분야라든가 공공분야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도 아울러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만 명 중에 한 20%(최대치), 그 수치의 근거는 뭐니까? 여론조사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일반적인 여론조사……

○**박준선 위원** 노동부에서 지금, 노동부를 비롯해서 경제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여론조사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방송·언론 쪽에서도 일반 국민들 상대로도 하고 조사들을……

○**박준선 위원**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들 여론조사 중에서 66.5%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 수치가 100개의 기업 중에서 66개 기업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원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경우에 아마 질문이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시켰던 모양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게 66.5%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내가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쓰고 99명은 교체하거나 해고한다 하더라도 66.5%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을 4년으로 늘렸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사가 없다고 한 기업 중에 만약에 4년으로 늘리면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아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볼 때 과거에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해서 4년 4개월 된 근로자의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확률이 63%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4년으로…… 근로기준국장이 한번 대답 좀 해 봐요.

지금 현재 2년의 기간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

우에 설문조사한 통계치가 기업들의 몇 %가 정규직으로 쓰겠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위원님, 근로기준국장 이기권입니다.

지금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내보낼 근로자 중에서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 현재의 근로자를 계속 쓰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는 우리가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든 뭘 해서 이 환노위에 법안으로 상정이 돼서 빨리 논의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200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부는 기대를 하고 대다수는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에요. 노동부장관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하루빨리 바꿀 수 있는 방안, 법안 제출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최근의 해고 사태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결국은 실업·구직급여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마는 특징이 조용하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제대로 가입돼 있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든가 하면 조직 노동자들로부터도 강한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바깥지대라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막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규직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는 2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해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제시가 책임 있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노동부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없도록 우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것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해고 위기에 당면한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 외에 다른 대안이 사실상 제시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노

동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지금쯤이면,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또 전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쯤이면 딱 만들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연장 이게 어떻게 그 대책이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하나의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조치를 통해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 속에서 나타난 문제인데요. 이걸 저희들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 노동부의 기본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개선 대책을 만든다는 것이 막상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 그러면 장관님 얘기하는 4년으로 연장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반드시 다 해결되는 것 아니지요.

○**김재운 위원** 4년 연장은 일순간 모면하는 데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 확보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산은 이미……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4년 연장으로만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비정규직법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환경만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선까지를 포함했습니다만 이 제도 개선과 동반해서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법인세 감면하는 하나

의 조치만 있는데 사회보험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정부와 다른 관계 부처와도 그동안 사실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가시적으로 어떤 조치로 만들어져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장관님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으로라도 하는……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기존의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이 정부, 노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야가 3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2007년부터 된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년도 채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3년에 걸친 합의 속에서 이런 결과가 얻었으면 이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김재운 위원 아니, 이게 왜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을 그렇게, 모든 중지를 모아서 됐다면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게 옳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저희들 노동부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정부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그러면 왜 기업이 그것을 같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노사정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때 이 합의할 때는 대충만 하고 합의한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법을 만들 때, 사실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한다면 지원제도도 함께 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 대책을 만들어 놓지를 않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조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이어받은 정부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가 뭘 합니까? 노동부가 그 대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촉구했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2월에라도, 추경이라도 지금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경해서 마련해야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이 추경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 당면한 여러 부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효과를 발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하면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용기간 연장하고 그 다음에 파견업종 범위 확대하고 이런 방안만 내놓으니까 과연 노동계에서 동의합니까? 결국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확산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문제가 또다시 사회 갈등의 한 요인이 되면 그 비용이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비정규직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이게 왜 방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치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방치한다면 방치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왜 방치를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시정하자는 그런 의도……

○김재운 위원 지금 법 개정의 취지가, 만약에 그 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당연히 동의하고 여야 모두 합의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의 취지가 뭡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는 말이지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정부가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 이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모든 정책이 근본적인 것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달성할 수 없다면……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더, 말하자면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도 상당한 부분 고용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더 넓힌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진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고용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전진적인 진전이 아니라 후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점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최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가 소득분배의 구조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연구 결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비정규직의 비율을 현재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GDP가 실제 규모보다 연평균 1.56~2.79% 높은 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이 우선돼야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쓰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10% 낮아지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이 경제력에 의해서 낮아져야지 법으로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10%를 줄인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아니, 지금 법을 고쳐 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찾겠다면서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이 비정규직이 발생한 것도 우리 경제력이 그런 보호법을 감당

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현실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대책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장관 이영희** 너무 이상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재윤 위원**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아마 정규직의 경우에 한 6년……

○**김재윤 위원** 지금 4년 9개월입니다. 5년인데요, 4년 9개월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6년 2개월입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은 6년 2개월, 비정규직은 2년, 그러면 평균으로 한 4년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것 4년으로 늘려 놓으면 누가 정규직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4년 9개월인데, 정규직도 6년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정규직도 6년밖에 안 되는데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 동안 연장해 놓으면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우리가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때 그것을……

○**김재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용어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냐, 기간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기간제라고 하는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간제라 하더라도 다른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다음날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고용기간이 짧은 게 뭐냐? 근로자가 스스로 더 좋은 직장으로 찾아갔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용제도, 말하자면 근로자를 쓴다고 할 때 기간제로 쓰느냐, 아니면 무기제로 쓰느냐…… 무기제라고 하는 것이 고용의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근로기준법 제도와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근로자의 기간을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노동부장관님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또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부장관님은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입니다. 제가 차별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보니 차별 시정제도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보다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으로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해 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용기간이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그런 효과를 주기에는 너무 과도한 기간 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기업 측인 사측이 왜 합의를 했겠습니까? 노·사·정 대타협으로써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마지못해 한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썄요, 기업 측에서 충분히 합의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노·사·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김재윤 위원 그 당시에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다 모여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를 통해서 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러면서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경제 위기만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책도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물론 이번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으로만 정규직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거기에 너무 모든 비중을 둘 수는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들을 다 강구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러한 강구는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와 사,정이 다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노·사·정의 합의와 국회가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소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합니다. 그동안에 비정규직 논의 문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노와 사의 의견 접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되풀이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노·사·정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정을 한다면, 사실상 언제 이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노·사·정이 3년 동안 머리를 맞대서 만든 결과물로서 현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노·사·정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김재윤 위원 아니,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구체적으로 아시려고 하면 제가 그때 당시 담당했던 직원을 답변하도록 하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합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공익위원이 기간을 3년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정부도……

○**김재윤 위원** 그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노·사·정 합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합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법제화되겠습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논란과 논의가 있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 잘 알면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기간에 대한 합의는 안 되었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노동부가 도대체 어떤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마련해야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사단체는 이해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재윤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홍희덕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0월 16일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노동자와 같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제정·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행정부 내 또는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레미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한 전국건설노조는 2000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덤프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노동부 남부지청이 2007년 3월 2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단체교섭도 하고 단체행동도 하는 등 수년 동안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제 와서 레미콘 기사, 덤프 트럭 기사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며 노조 설립 신고증 반려 운운하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노동부장관이 하셔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노조와 운수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도 불법 단체로 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레미콘 근로자들과 할까 그런 데 종사하는 특수고용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약자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 뭔가 개선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에는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을 때는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소위 차주라고 할까요,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홍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필증 할 때 그런 것을 스스로 살펴야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신고할 때까지는 적법했지요. 그 이후에 조합 가입을 추가로 받으면서……

○**홍희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충도 진정을 했습니다.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서 경총이 진정한 자격이 없어 내사 종결을 했고요.

경총에 사건 처리 결과 회신을 하면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율 시정토록 하고 있다고 회신을 했고요. 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도 여러 정황상 비근로자가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율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고 정황상 추정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노동부는 평소 다른 사건에서도 정황 추정을 해서 시정명령 같은 것을 내립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할 때 뭔가 잘못된 사실이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실이 없으면 시정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노동법상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그 안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떤 분규가 있었다든가 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결의가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할 때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황만 해 가지고 추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막 짧막하게 답변하십시오.

법조문도 잘못 써 났어요. 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는 “노조법 제9조 2항”이라고 적고 있는데 노조법 제9조에는 제2항이 없습니다. 내용도 무관한 것이고요. 잘못된 법조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마치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조법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만 설립신고증 반려조항이 있고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반려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시행령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에는 설립된 노조에 대한 반려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 평소 눈에 가시로 여기는 민주노총을 고사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

고 그런 측면에서 당장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보낸 자율시정명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우선 이 조치는 민주노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도 해당이 되어서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안지청에서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주노총에만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드리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을 주었습니다. “30일간 내에 그러한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자율시정기간을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이 자기들이 위법한 노동조합원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실제로 지금 건설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직률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있는데요.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 안 하는 조문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기존에 벌써 많은 조합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문제 삼아서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렇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단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조합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고용관계에 있는 관계하에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인데 거기에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렇게 확정하지 마십시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 짧막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오늘 답변 주 하셨습니까만 최저임금의 개정과 비정규직법의 기간 연장 또는 파견업종 개편·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에 대한 장관님의 철학이 변함이 없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본적으로는 제 철학이,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거기에 제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오늘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별시정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실효방안은 홍보와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노동부의 일상활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정말로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차별 시정을 위해서 물론 저희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법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도 현장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은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제로 작동되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아직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지난번으로 보면 약 20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희덕 위원** 장관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꼭 시정 신청 이전에라도 노동부는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부가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서 적법·불법파견으로 판단한 해당 근로자 수, 업종별 구분 자료조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불법 파견, 외주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사안별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희덕 위원** 거기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위반 건수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로는 정확한 통계가……

○**홍희덕 위원**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혹시 어떤 숫자를 말씀하

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2001년부터 노동부가 3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소위 위장 도급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626개 사업장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본 3029개 사업장도 사내하도급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노동부에서는 이번에 처우 개선을 할 대상이거든요. 처우 개선할 사내하도급 노동자 규모를 노동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하도급하고 근로자 파견에 대한 점검을 200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2500건 정도 업체를 조사를 해 왔습니다.

○**홍희덕 위원** 했지요? 그러면 규모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를?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지금 숫자를 머릿속에 모두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희덕 위원** 기준국장님, 이거 숫자가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근로기준국장 이기권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으로 받을 때는 방금 장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파견 사업장,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사업처리했느냐 아니면 행정처분을 했느냐 시정을 했느냐 그 건수를 저희들이 통계로 갖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건수만 있고 사람의 숫자는 없다는 겁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 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가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해서 적법하다, 불법 파견이다라고 판단한 해당 근로자 수, 업종별 자료조차 없다는 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사업장 점검 시총만 한 게 아니냐…… 진짜로 없는 거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위원님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고요, 1년에 한 2만 4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만 4000개 감독을 하면서 일일이 근로자별로 통계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위반 내용하고……

○**홍희덕 위원** 전수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게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저는 그 사업장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 규모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위원님 사람 숫자까지 다 하게 되면 많은 행정력이 필요로 합니다.

○**홍희덕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불능력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자도 먹고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장관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장관님의 생각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장관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장관 생각에 맞추어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최저임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87%, 그러니까 전체 적용 가능 근로자를 208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7%가 아주 취약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있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보다 이상의 임금을 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약한 30인 미만, 더 아래로 내려가 볼 때 제가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냐 하지만……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한계사업장에서 정말로 최금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 경우에 지원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국가가 하나의 세제를 통해서 하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사회보장적 방식으로 근로자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영세기업에게 최저임금을 하라고 그래도 지불 능력이 없으면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문 닫아야 됩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업을 퇴출하라, 우리가 지금 '9988'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그런 영세사업장들이 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문 닫아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희덕 위원**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그런 것도.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홍희덕 위원** 최저생계비를 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홍희덕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원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신자유주의 금융제도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장관님이 잡으신 정책도 일리가 있는데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은 쉽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택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나누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어떤 고용이나 실업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정부나 여론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참아 줬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소위 말하는 사면도 많이 해 주고 말이지요. 삼성, 현대, 한화, SK, 두산,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지만 우리 경제에 흑여 악영향을 미칠까봐 많이 덮어 줬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좀 나서 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59개의 대기업에 사내 유보금 한 400조가 있습니다. 이 400조 중에서 다문 100조 이상 정도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대기업들이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대기업이 그런 노력을 해 준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식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제는 대기업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대기업에서 나서 주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대기업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 경제 어려울 때, 나라에 돈도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400조 지퍼 잠그고 안 내놓으면 나중에 그런 지탄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나서서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든지 하시고 전경련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제 대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00대 대기업에서 한 2.5% 도로 줄었어요. 사회적 의무라든지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사내 유보금이 400조나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돈 풀지 않고 고용 창출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자기 기업들만 살겠다, 그러한 썩어 빠진 대기업을 국민들이 나중에 심판 안 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기업도 나름대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 또 그 속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이 상

생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저희 노동부로서는 대기업이 자체에서 채용을 늘려 주는 것도 대단히 희망을 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이 스스로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봉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그 고용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사면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 고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아마 장관님한테 여쭙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책무를 가진 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가진 쪽에서 풀어야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귀족 노조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업이라는 과정까지를 밟고 있는 일부 귀족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통계 하나만큼은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3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대중 수출이 지난 11월 달 32.6%, 1월 달에 38.6%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이런 추세로 수출이 떨어지면 약 350억 불 정도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작년에 전체 960억 불 수출했습니다. 중국에만 130조 정도 되는데 한 350억 불 떨어지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46만 명 정도가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수출이 떨어지면 일감이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바로 급격한 실업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통계입니다. 분명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국가의 수출이 32%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깐 우리가 조금 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실업이 나올 거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모 중공업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 회사가 중국에 엄청난 수

출을 했는데 최근에 그쪽 수출이—중기, 굴착기 이런 것입니다—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보다 크게 줄어 가지고 결국 지금 잔업이니 모든 것보다 스톱하고 최소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더 악화되면 거기서도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경영자한테서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이 사실은 2년을 연장해서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을 가면 그대로 놔둬야 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요.

○조원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나 수출 지표, 취업자 수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1월 한 달 사이에 전년 대비해서 26만 7000개가 줄어 버렸습니다. 전년 1월 대비 26만 7000개 줄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700만 선이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11월 달부터, 십 몇 만 개부터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15만, 16만, 26만, 이게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로 계속 일자리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업 대란이 올 수 있는 징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임시·일용직 700만 중에서 삼사백만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는 시각이 한 3개월 전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또 다르다 이거지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뛰어 넘어가지고 그러한 급격한 실업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게 1사1촌과 같이 1사1학과 제도를 좀 하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이고 중소기업에도 많은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1사1학과 제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관련과, 예를 들어서 섬유학과 같으면 섬유에 관련된 업체하고, 중소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하고 나면 6개월 지

나서 6개월 재취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는 율이 20%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청년인턴제를 하는데 자기 전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1사1학과, 1중소기업1학과에 자매결연 제도를 좀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과에서 기업하고 산학연계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용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턴은 곧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만,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 환경이 기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여러 가지 시책으로 볼 때 중소기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넓혀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신 운동이나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다른 면에서, 여성 가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20%가 여성 가장 근로자인데 지금 실업에서 남성의 실업률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4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의 가장 역할이라는 것은 그분이 벌지 못하면 바로 굶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까 말씀하신 임시·일용직 이런 경우가 대체로 여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워낙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데다가 그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으로는 실직 여성 가장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고용을 할 경우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이분들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훈련제도 등등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편 노동부도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런 여성들에게 더 많은 비율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보완해서 실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IMF 이후 딱 10년 만에 이런 경제 대란이 났는데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학생 한 명 키우려고 16년 동안 허리띠를 매고 모든 기대를 거기에 걸고 있는데, 46만 명이 올해 졸업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을 못 간 10만 명 정도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55만 명, 6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지금 평년에 비해서 17% 정도 떨어졌는데 그분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집에 있어야 되고 부모는 학생 눈치 보기 힘들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서 가지고, 대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만 좀 해 줘도 굉장히 큰 짐을 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기업 마인드, 국민에 대한 마음을 좀더 보여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하고 산학 연계되는, 대학과의 연계를 좀더 진실되게 실질적인 효과 있는 데로 하자는 거하고, 세 번째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좀더 철저히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 역점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화수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안산 상록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물론 장관님께서 주장하시

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도 하지만 사용기간 2년 연장해서 4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다른 더 좋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좋다고보다는 가장 원칙적인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기도 했지만 고용계약 기간의 규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기간의 설정은 자유롭게 하고 그런 면에서 기간에 따르는 차이에 대한 보호랄까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새로운 논란을 너무 크게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위기 문제에 국한해서 볼 때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간제 근로자 유형이 당장 실업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우선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 또 각급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은 계속 사용기간 2년 연장을 주장하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법안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각계각층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무부처가 노동부이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계속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경제 쪽,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장관들이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1년 전 IMF 때 노동자,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는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업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해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더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호감 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

향으로 가서 항상 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 기간제 경우에 저희들이 결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이것을 연장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비정규 근로자 당사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노동계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말하자면 2년 규제했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2년 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시고 반대를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좀더 전향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 자리에 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어떤 방안이 좋은가,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도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추진은 중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사간에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최저임금이 이제까지 20년 동안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정되는 그 구조는 변경되는 것은 나름대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왕이면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경험으로 볼 때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무리스러운 과정도 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이해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현행 제도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90일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고 90일 동안에 합의가 안 되어 버리면 현재의 최저임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

금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최종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선에서라도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직접 결정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시행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의 37.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저임금이 높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인부로 쓰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노동부가 서둘러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저희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가지고도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임금의 적용률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률이 아마 13% 넘어섰을 겁니다. 과거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4%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만 이상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영세기업에게는 상당한 하나의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和洙 委員** 장관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다음에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난번에 한 625명 정도의 인턴을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너무 부족해서 지금 한 800여 명 정도 인턴을 더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 업무에서 취업상담에는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 증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좀더 근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李和洙 委員** 인턴을 늘려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양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작년 국감에서 노동부 감독관들 부족했는데,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크게 충원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는 충원이 됐습시다마는 아직도 정원에 미달합니다.

○**李和洙 委員** 아직도 얼마나 못 채웠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근로감독관이 지금 아마 정원으로는 한 160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 정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아직도 200명 정도 부족한 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노동부차관 정종수** 근본적으로 근로감독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현재 노동부 정원에 배정된 인력을 실제 이제는 채운 겁니다. 말하자면 정원 대 현원의 결원이 많았는데 이제 결원은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李和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배정된 인원에서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부족해요? 작년에 많이 부족했는데?

○**노동부차관 정종수** 현재 200여 명은 충원이 됐고……

○**李和洙 委員** 지금 공무원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실업 구제도 하실 겸 그리고 부처에……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근로감독관 업무량이 신고사건 처리하는 게 평균 한 60건 갖고 있으면 적절하다는데 요즘 120건 이상 갖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고용지원 업무도 정신없이 바쁘지만 지금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매일 야

근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실업도 구제할 겸 충원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나……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전체 행정인력에 대한 충원인데, 그동안 이 부분은 노동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고용지원센터 인원도 많이 충원하실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지금 한 28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일본은 우리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한 1만 8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2개 정도 있는데 일본은 6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이런 인력 확보하고, 또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李和洙 委員** 바로 인력 충원하는 게 어렵다면 노동자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일정 부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 금년에 100명 정도 명예상담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자원 봉사적 의미에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우는 못 합니다만 대단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李和洙 委員** 장관님께 이 부분은 고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청에 소속되었던 고양지청하고 의정부지청이 금년 4월 1일부로 경인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 부분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인천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이 그게 경기도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인구가 1150만이 넘었습니다. 인천은 인구 몇인지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 그 부분은 대국대과를 지양하라는 기본적인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아마 조만간 지청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 이화수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데 반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게 이전이 힘들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천경제특구가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특구노동청으로 그것은 존치를 시키고 경기지방노동청을 새로 신설하면 되지 않겠나……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조치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거 가급적 속도를 좀 빨리 해주시면, 노동부 공무원들이 경기청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것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해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정규직법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많이 소란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을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저희 정부로서는 종전대로의 관행으로 본다면 정부 제안 입법으로 가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도 명확하게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당과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워낙 사회적 현안 사항이고 쟁점이 되는 그런 법안이기에 때문에, 또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당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당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시는 데, 말하자면 결국 당에 넘겨 드렸다고 하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당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저희들과도 잘 협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기대하는 바도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도 여당 소속이기는 한데 저희 당 안에서도 이게 통일이, 정리가 빨리 안 되고 여당의 입장도 단일하게 빨리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없는 상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7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사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 법을 그대로 놔둬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같이 정규직 전환은 제대로 안 되면서 비정규직 있는 자리마저 대량으로 실직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그것도 다 우리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야당이나 노동계나 다 그때 되면 대량실업 사태 자체를 가지고 대단히 비판하고 공격을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고치려고 하면 비정규직을 고착화한다, 영구화한다고 또 비난을 받고요, 야당이나 반대하는 장외의 노동계나 또 일부 사회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참 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치려고 손대면 비정규직 고착화한다, 영구화한다고 비판하면 되고, 그 비판이 부담스러워서 놔두었다가 만약에 걱정한 대로 대량실직 사태가 나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그것 가지고 비판하면 되고, 또 투쟁하면 되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이지요.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되고 책임은 없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사실 지금 이 법 그대로 놔둬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없다, 비정규직도 그대로 안고 가면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안 되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안 되면서 비정규직도 막 잘려 가지고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그때 진단을 잘못했다, 그때 그 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법을 손 봤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책임질게 이러면, 그것은 정도죠. 사실 올바른 도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과학적으로 과연 이 법을…… 여러 가지 의견도 엇갈리고 여론조사라고 인용되는 것도 다 제각각 다르고 한데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해 볼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비정규직조차도 오히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면 그 판단에 근거해서 정치적 결단,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예측이 틀려 가지고 결과가 예측한 것보다 안 좋으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이 법이 정치화된 논쟁 속에 들어가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이 있고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 정부로서는 여러모로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법에 관해서는 백가쟁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견해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대안이, 어떤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검토를 하면 저는 수렴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원론적 수준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 논의가 좀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백보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에 진짜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되고 비정규직도 더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 전환은 안 되면서 비정규직 직원만 많이 실직할 것이냐 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하는 사실관계 측면, 과학적 영역 그것에 대한 결론과 입장이 서로 계속 다른 것에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면 더 복잡해지지만 그것이라도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정리되고 통일적으로 가면 전체적인 논란도 그 안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수렴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논의는 많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주장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의 내용을 좀 진지하게 경청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보면 여러 가지 실증적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본인이 생각하는 데 유리한 주장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유리한 주장 하나만 선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어려운 서민들, 또 어려운 근로자들, 당장 직장이, 일자리가 불안정한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계층들이 보면 국가가, 정치권이, 참 저도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기가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선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가장 먼저 용광로 같이 녹여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조해진 위원 여기서 합의 안 되고 결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안 나면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당 비상경제상황실 민생·복지팀에서 관악구에 있는 노인 일자리만들기센터를 갔다 왔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 봤는데 참 발상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서비스

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 누군가 그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거기에서 급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일자리화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정과 연결시키고 수익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령 계층에게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을 크게 보면 일자리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그 일자리센터 자체에서 그런 기획 기능까지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인력개발원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런 개발원 또는 우리 부 차원에서 그런 기획 기능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우리의 지금 고용 구조가, 특히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사실은 이윤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진출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좀 국가가 지원도 하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경기에 대한 모면책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그 분야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면 면에서 복지를 증진하는 일자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지속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한 단계를 더 높여서 관리를 하고 더 잘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적 기업원이라고 하는, 좀더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조해진 위원**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하여튼 제 주변에서는 우리 세대에 나이 50 넘으면,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장은 50대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꾸 가고 있고, 나머지 길고 긴 세월을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수입을, 생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건강을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고령자 층을 부양해야 될 근로 계층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는 참 심각한 문제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인 일자리 중에서 그때 만난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굉장히 테크노크라트나 아니면 엔지니어나 하여튼 지식 뭐랄까요? 지적인 직업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다수가 단순 일자리였거든요, 단순한 노동이고. 그것도 물론 보람 있고 건강에 좋지만 사회적으로 축적된 경륜이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연장시켜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질 높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모든 분들을 다 단순 노무자로, 단순 일자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좀 미래의 얘기입니다마는 향후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계속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쭙어 보니까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이상 되는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럴 겁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단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월수가 아쉬운 분들은 오히려 그 계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즉 직접 연결이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저임금 부분에서 고령자 임금을 본인이 원하면 10%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하자고 한 그 배경에는 지금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50세가 아니고 60세 이상을 말하는 경우입니다—한 3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서베이를 해 보니까 100만 원 이하라도 좋으니까 일 좀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니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노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왕

이런 더 젊은 사람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좀더 갖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결코 그분들의 임금을 낮춰 가지고 고된 노동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기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고용자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한 10% 정도 좀 낮추자 하는 취지도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고용, 일자리를 좀 넓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금피크제가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채택이 안 되고 현장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는 54세부터, 사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55세에서 근로자들이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 연장해서 60세까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것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노사 합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본인이 동의하면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근로자 개인의 자기 선택권일 수 있는데 사용자와 직접 협상해 가지고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사회를 보면서 느낌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대한 권고와 질책·충고 다 좋습니다마는 훈시적이거나 훈계적인 발언보다는 내용상의 날카로움과 지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나치게 정쟁적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자리는 특정 당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정홍보 차원의 발언은 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자 측인 장관님께서도 ‘당’, ‘당’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마치 여기가 특정 당의 내부 당정협조 업무자리인 것처럼 하는 자세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정치권이 자꾸 말만 앞서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은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입니다. 정부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 분석,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집단을 만나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축적이 됐을 때 추진력이 생기고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방송 이하 오전부터 내내 여기 대기 중이고 열심히 촬영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 내실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목이 큰 이 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장관님의 답변이 조금 더 내실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강성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 이화수 위원께서 얘기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지금 노사가 하는 부분을 해서 합의가 안 될 때는 공익이 정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의 요지인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을 지금 깎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벌써 임금 동결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깎겠다고 하면, 작년에 임금을 동결했다고 하면 임금을 벌써, 이미 물가는 올라갔고 월급은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벌써 임금 동결이 아닌 임금을 반납을 한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을 손을 대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아마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이 어디에서 쌓였냐 하면 10

년 전에 IMF가 생겼습니다. IMF가 생기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동결,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근로자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고통을 전담했다. 그래서 20 대 80 사회가 거기에서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노동계에 팽배해 있다고 하는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노동부가 이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을 분담을 하려고 하면 차체에 정부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00조의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풀면서 '우리도 이렇게 풀 테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게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10조, 20조를 풀면 자기네들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서도 어떻게 그 기금이 자기 회사로 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기업의 행태가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욕을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덕적인 해이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신,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면을 봤을 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0조의 돈을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풀 수 있도록 재계에다가 건의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저는 믿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연말에 언론보도 중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재계가 요구안을 내놓으면 노동부장관이 소신 발언 형식을 빌려 이를 대변하고 노동부는 그때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긋지만 결국 장관의 발언은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이 되더라.' 하는 이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장관님,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어느 신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본 일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썄, 그 기사 모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게 2008년 12월 28일 경향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기사의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강성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강성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노동부는 지난 2008년 12월 24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임금·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하도록 2009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올 1월에 2009년 노동부 입법 계획에 근로기준법 개정 계획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맞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작년 2008년 3월 13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임금·근로시간·해고 절차 등의 유연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근로기준 유연화·선진화가 노동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돼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해고 등의 근로기준 유연화가 노동부의 최고 숙원 사업이라도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근로기준 선진화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향후 노동행정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근로조건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고용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것처럼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유연성이 다른 선진국처럼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노사정 합의를 모아간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에 건 드라이버와 똑같이 해고를 포함한 근로기준 유연화 법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노동계는 안중에도 없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처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항간에서 흐르고 있는 노동부냐, 아니면 사용부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님께서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근로기준 유연화를 위해 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를 만드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이 연구회의 설립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환노위원들에게 한번도 보고한 일 없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아직 그 연구결과가 정식으로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해고 유연화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비정규직법 못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해 노동부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번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국정보고 때 이미 근로기준 선진화를 위한 것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런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대체로 우선 관계 법 전문가들의 연구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 한번 논의를 부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론의 과정은 거칠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연구회 설립 이후 11번이나 회의를 가졌지만 변변한 결과물조차 생겨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계획에 법개정 시한까지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개정을 노동부의 일방 독주로 진행하면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로기준 선진화 그것을 한 측면에서 유연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 위원님께서 너무 좁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해

야 됩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치열한 국제경쟁 체제 속에서 선진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 모든 체제가 개선돼야 될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이 바로 서서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노사가 상생하는 그런 노사가 그리고 노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노사가 힘을 모아 비상대책회의까지 꾸려가면서 경제위기를 넘어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사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을 조바심 내가며 추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여론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올해 근로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동부가 일관되게 말해 오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중에 중소기업 고용구조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8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실무자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입니다. 남은 접수 기간이 오늘 빼면 이틀 남았네요. 실무자, 국장님, 맞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 2월 19일 기준으로 한 업체도 신청한 데가 없는데 오늘은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어제 현재 한 건도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부가 힘주어 말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37억이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산 37억이야 다시 모집해서 대상 사업체 348개를 채워서 소진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신청건수가 제로건인 사업인데 추가 모집으로 겨우 업체 숫자 맞추어서 컨설팅이나 지원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고 해서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신청이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수 마감 기간 동안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연장을 해서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닿는 정책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을 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책이 과연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노동부의 홍보 노력이 많이 부족했거나 사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노동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어디 믿음이 가겠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지속하는 사업도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특히 최근에 저희들 업무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정대로 진행시키지 못한 측면들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서 원래대로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37억을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정규직 전환이나 실업급여에 보태 쓰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고용안정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죽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사업성과가 별로 안 나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합시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대책은 곧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금은 부진합니다마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답변하시는 그동안의 요지로 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 안 쓴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지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더 추진할 것인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 관계로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시간은 5분이면 되시겠습니까, 7분

해 드릴까요?

열정이 많으신 김상희 위원님 존중해서 7분으로 하시지요, 5분을 하다가 말이 끊어지시니까.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먼저 하시지요, 바쁘십니까?

○**김상희 위원** 예.

○**홍희덕 위원** 그러세요.

○**委員長 秋美愛**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정말 7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법 부칙에 보면 이 법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2년 기간 지나면 정규직 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리고 박준선 위원 질의에서 보니까 2008년도에 그 당시에 2년이 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1년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적절치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하면 13개월이 된 사람, 5인 이상 13개월이 된 사람 그리고 55세 미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3만 8000이고 그냥, 그런 것 따지지 않고 13개월 이상만 따지면 5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90만이나, 100만이나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만이든 90만이든 이분들이 2년이 되면 다 해고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해고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고용이 될 수 있고 또 교체해서 그 사업장에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는 경기요인입니다. 경기가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하기도 하고 교체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경기요인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년으로 연장한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이 고용을 또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올 7, 8월에 우리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100만에 대한, 100만의 허구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100만이나 90만이나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2만이나 3만이나 5만이나,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부에서 지난번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나 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서 전망하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용역이 있었느냐,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속에서 대책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미국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봤는데 경제위기 이후의, 작년 11월, 12월 이후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전부 다 오히려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특히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하고 사용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서 3년간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진보정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노동유연화 법안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영국, 파견근로자 동등대우법 노·사·정 합의했습니다. 독일,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했습니다. 미국, 오바마가 제1호 법률로 임금차별금지법,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이 법을 소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나 그리고 노동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나 조사나 모든 것을 다 보더라도 장관님께서 이렇게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확대하는 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98만이라고 하는 그것 빼놓고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감입니다. 감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처럼…… OECD에서 아마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가장 심하고 그리고 고용조건이 가장 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장관께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올해 잘못된 산정에 의한 90만, 100만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장관님께서 빨리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 선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사정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노총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주요 시민단체들 아무도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는 이것을 합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의를 할 것이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간단하게 답할까요, 아니면 길게 답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상희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깊이 참고해서 우리 노동정책에 상당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핵심적인 것을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김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시간을 제가 뺏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아니요, 괜찮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김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또 충분히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가량이 고용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실업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7월 달에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100만 명들이 바로 실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 지속적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토털하면 지금 전체 비정규직 숫자로 볼 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도 이미 나오는 숫자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근거 없이 했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쓸데없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예 이대로 놔둬도 좋다고 하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3만 8000명 정도밖에 해고가 없을 거라면 왜 이렇게 저희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근거는 분명히 있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못하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충분치 못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억이나 1조를 쓴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바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그런 정책효과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중되어 가지고 이것이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제현실 속에서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지 돈을 그냥 퍼붓는다고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한편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비정규직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그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고용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고용을 안정,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차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점에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저희들 노동부의 정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장관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 고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에 최대 5000만 원, 외국인을 국내 근로자로 교체하게 되면 1인당 120만 원을 1회 한 해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희덕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잘……

○**홍희덕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저는 이런 것은 명백한 국적 차별이고 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가차 없이 이런 정책으로 내댈다면 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IMF 때도 교체외국인 1인당 100만 원을 지원 하는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국내 고용을 진작하기 위해서 외국 인력을 희생시킨 거지요. 하지만 그 효과가 검증된 바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경제가 어렵다고 당장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까 120만 원의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체가 고용환경시설 개선을 해서 고용 증가를 했을 때 근로자당 120만 원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한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만 홍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하시고 하는 것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역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어쨌든 자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우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국내 근로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내 근로자를 더 채용하도록…… 지금 우리 국내 실업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큰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기업에서는 외국인 최저임금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 노동부는 한결같

이 그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논란이 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또한 삼성반도체에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평택의 동우화인켐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 혹은 제조하는 화학물질도 노동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우화인켐이 영업상 비밀이라고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소위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노동부에까지 제출하지 않는 화학물질 목록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산업안전국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반도체 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공개될 경우에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업 부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부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근로 환경이 좋다고 보는 그런 첨단산업 분야에도 직업병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는 데 굉장히 유의하고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과연 그 작업장에서 발생했는지 등등 역학조사 등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법적 구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부분은 특히 저희들 공단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첨단을 달리는 삼성반도체라든지 한국타이어 같은 곳에서, 여전히 올해도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자기네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공개했을 때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산재의료원에 대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을 위한 추진단에 전문가 및 산재환자 단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유지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단은 노동부와 양 기관의 경영진만으로 구성되었고, 지금 산재의료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진료과의 폐쇄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통합 이후의 산재의료 운영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수 위원님 하십시오.

○**李和洙 委員** 2월 15일 날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장에서 건설노동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대표적인 산업재해로 생각되는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40%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거든요.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건설계통 자체가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 그 다음에 또 근로자가 보다 안전의 의무를 스스로 소홀히 한 점 이런 등등이 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지금 SK 공사현장에서는 사고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조사를 다 마치셨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됐는데 작업 인부들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공사비 절감을 하기 위해 하다 보니

까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도 그 사고가 그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근로자가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특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사업주든 등등 책임이 있으면 마땅히 엄한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그리고 제66조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까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징역에 처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모든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시다.

○**李和洙 委員**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대체로 지난번 처벌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습시다만 우리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경하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의 규제로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경우와는 다릅시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히려 행정처분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국장님, 징역형 선고받은 적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입니다.

구속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징역형에서는 대개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李和洙 委員** 벌금 많이 물은 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벌금은 다양하지만 검찰에서 우선 구형하기를 1000만 원 안 짝이고요. 실제 확정된 벌금들은 대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처벌이 솥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사업주

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다음은 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님!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면 핵심추진과제로 자격관리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이거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보니까 2005년도에는 112건이고, 나머지는 한 200건 이상씩 되는데 효율적인 예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지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대여라든지 알선·거래는 자동검색엔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불법대여 사이트·카페·블로그 등을 적발해서 폐쇄요청 고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리라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취소 또는 정지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격증 소지한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홍보하는 절차를 많이 강화하고 있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리고 시험을 치는 당일 날 홍보도 하고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의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장관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집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비정규직이 2년 있다가 4년이 되면 본인들은 4년이라는 고용기간을 우선 비교적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본인이 만약에 정규직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확보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경력으로서는 상당히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도 직업 전환하는 하나의 기간으로서도 좋고, 반면에 회사로서도 사실 회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인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4년 정도 그 회사에서 근무한 좋은 인력을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한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기간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도 나온 바와 같이 그것은 이 비정규직법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4년 4개월 근무한 경우 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율이 65% 가까이 됐다고 하는 통계를 볼 때도 저희들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그러면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보장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재윤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3년 6개월 쓰고 나서 해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2년이 가까워 오니까 해고하듯이.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러니까 기업이 해고를 하느냐 쓰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 2년의 경우에는 가볍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계속 비정규직 쓰기를 원한다면 3년 6개월 정도 쓰고 다시 해고를 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또 그 비정규직을 3년 6개월 쓰고 또 비정규직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같은 근로자세요?

○**김재윤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반복 갱신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김재윤 위원** 같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럴 수 있지요.

○**김재윤 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왜냐면 기업이 해고하기가 좋은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지 정규직을 쓰려고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규직으로 쓰나 비정규직으로 쓰나 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장관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제도개선 하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혹시 이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한 차례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특정한 학자한테 연구용역을 주기보다는 많은 토론이랄까요 그런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노사를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의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7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구성한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늦었더라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진작 왜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우리 국회가 비정규직 문

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그런 요구를 정부가 받아서 더 뛰어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고요, 저는 국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윤 위원**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 고용률이 최악의 수치입니다. 고용대란을 이미 우리 국회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고, 장관님께서도 몇 번 올해 고용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노동부에 그런 팀이 꾸려졌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 고용위기관리 대책 TF는 구성돼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이미 경제위기·고용위기에 대응한, 저희들 조치로서는 일단 실업을 막기 위한 조치와 그 다음 실업자가 발생한 데 따르는 생활안정정책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보험안정사업이랄까요,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경제위기다 경제위기다 하면서요,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들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회성인 건설 단순직 확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안정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과 보람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가 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당연히 저희 노동부로서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의 일자리가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내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노동부의 하나의 책임이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아닌 정부가 어떻게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아까 고용의 유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시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이 고용배제적인 방향으로 갔고, 그것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얻게 하기 위한 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제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노동부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재운 위원** 보다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정부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끌어들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역시 우선 당면한 실업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또 심화되는 위기에 대한 저희들 추가조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임시적이고 한계적인 일자리를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제가 빨리 성장해서 좋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의해서 고용이 흡수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노동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말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서라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시다만 SK 공사현장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자수가 1위인 것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하여튼 많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한 2300~24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 재해율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사실 그동안 저희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해 가지고 그동안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예방 행정을 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최저임금법 관련된 다른 문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장관님, 아까 홍희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점점 높아져오고 있는 추세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교한 임금수준하고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비한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한 작업과정에서 그 외국인이 노동하는 생산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어떤 요소랄까 아니면 취업하기 전의 직업훈련 등등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비교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큰 생산성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생산성 차이는 없는데 임금은 내국인이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내국인이 높다고 봐야겠지요.

○**조해진 위원** 그러면 생산성만큼의 받는 임금 대우를 놓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아직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임금차별은 하

지 않습니다마는, 허용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은 동종의 업무보다 대체로 임금이 굉장히 낮은 3D 업종 아니면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잘 제공되지 않는 숙박비나 식비 등등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실제로는 그 부분이 국내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한테는 보통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숙박비 식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했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은 그만큼 국내 내국인 근로자들하고 격차가 좁혀지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게 점점 좁혀지면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저임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것은 국내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현실적인 그런 측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겨우 때로 손익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 점점 최저임금에다 플러스 다른 추가지원까지 해 가지고 경영부담이 점점 많아지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합리적 차원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사실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와 합의해서 임금으로 줄 것을 숙식비로 줬을 경우에, 기숙사라든가 식비를 줬을 경

우에 그것을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서도 반드시 현금 급여한 것만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임금계산에 현물급여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포함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은 무한정 인정하면 불합리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 한도 내에서 숙식비에 대한 포함을 하자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부분에서 내외국인과 관계 없이 그 부분은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기업들이 점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은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에 한 공장에 전적으로 외국인만 쓸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한 10% 정도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데는 20%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외국인만 사용하는 기업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영세기업에게 점점 부담이 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생각해서 가지고 어쨌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올해 고용하고 실업예산이 5조 4000억이 배당이 돼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집행이 돼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새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하도록 아주 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통계를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조원진 위원** 지금 한 65%에서 70% 정도 집

행 안 됐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원래 저희가 상반기에 70% 정도를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70% 정도 집행하기로 하고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 약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월 달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은 9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2월, 3월, 4월, 5월 정도, 6월 전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업이나 고용 부분이 5조 4000억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고, 또 실업이 훨씬 더 많아져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분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조원진 위원**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추경에 대한 준비를 노동부에서는 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추경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협의 중이라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또 유지,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은 사실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자리 유지하는 부분은 전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이뤄져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에, 아까 제가 대기업 말씀드린 것도 대기업이 출선수범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출 초입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쪽이 금융 쪽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입을 줄이고 사람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쪽에 좀더 많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은 우리 예산 부분들이 이 두 부분보다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

희 노동부로서는 지금 일자리 유지라든가 생계비가 우선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 유지하고 나누는 부분에는 좀더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일자리를 잘려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예산이 좀더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또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업들도 지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들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유지한다든지 나누는 부분은 좀더 빨리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수요가 이렇게 크게 늘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580억 정도를 우리가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수요를 예상해 보면 앞으로 3000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요건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일자리나누기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보다도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강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리거든요. 그래도 노동계보다는 우리 정부에 있는 분들이 가진 쪽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손을 먼저 내밀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견지해 주시고요.

2월 11일 날 우리 서부고용지원센터에 갔지 않습니까? 계시는 분들이 1시간씩 기다리니까, 실

업해서 오는 것도 사실 체면이 안 서는데 실업급여 받고 고용 문의하고 하는데 1시간 기다렸다가 10분 얘기하고 끝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요.

그래서 650명 추가를 했지만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원 추가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예산 때도 그런 인원 추가를 좀 올리서 가지고……

고용지원센터 가 앉아 있으면 최소한도 오면 한 2, 30분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10분 ‘뭐 필요합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원센터가 안 되더라 이거죠. 우선 인턴을 하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빨라 가지고 교육 하루만 시켜도 잘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은 우리 경제가 각 기관들마다, 외국기관들이 노무라증권은 지금 마이너스 6%, IMF는 마이너스 4%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상반기 마이너스 4, 5%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잡으실 때도 희망이지만 마이너스 2%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인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 거의 마이너스 4%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마이너스 4%까지 올 경제성장률이 가게 되면 전반적인 게 다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세수관계만 해도 마이너스 1%의 차이에 한 1조 5000에서 2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예측한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가지고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동부 및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는 박준선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그리고 김재윤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기상산업진흥법에 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윤
박대해	박준선	이화수	조원진
조해진	추미애	홍희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노동부				
장관	관	이영희	정종수	송영철
차장	관	신영필	이기권	정현욱
기획조정실장		정철균	이성기	조정호
고용정책실장		이재갑	허원용	이우룡
노사협력정책국장		장화익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고용서비스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원배		
기획이사		이우현		
보험관리이사		정구현		
재정복지이사		고양배		
감사		서송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유재섭		
기획운영이사		김동희		
능력개발이사		김홍재		

자 격 관 리 이 사	정	재	홍
국 제 인 력 본 부 장	김	남	일
감 사	송	승	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노	민	기
기 획 이 사	김	동	섭
기 술 이 사	홍	용	수
감 사	고	성	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 사 장	김	선	규
기 획 관 리 이 사	임	인	주
고 용 촉 진 이 사	손	영	호